

2026. 5. 12.(화)
보도시점 국무회의 종료(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5. 11.(월)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연결한다”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첫걸음

- 정은경 장관,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
- 위기 상황인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가구는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후 선제 지급 -
- 위기가구 방문상담 시 생활물품세트 ‘희망드림 꾸러미’ 지원해 초기 접근성 제고 -
- 취약아동 포함 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사례관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제도 운영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하였다. 기존 ‘복지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예측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운 ‘복지안전매트’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하였다.

<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 개요 >

- (아동양육 가구, 3.18.) 5인 가구(부, 네 자녀)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차례 상담·지원(긴급복지, 아동수당, 현물 등)했으나,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거부(사유 미상)하여 미지급
- (노인돌봄 가구, 3.10.) 3인 가구(모, 자, 손자)에서 60대 아들이 90대 치매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에 자살 시도,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했으나 재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경제, 돌봄, 정서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발굴-개입-지원·관리 단계별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 추진, ▶아동·노인 돌봄가구, 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추진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기가구 발굴부터 개입, 지원 및 관리까지 각 단계별로 구성하였고,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추진 방향 >

방향	<p>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p>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개입-지원·관리 단계별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 추진 ▶ 아동·노인 돌봄가구, 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과제	<p>[발굴]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체계화 <small>▲ 시스템개선</small> 위기징후 선제적·체계적 포착, ▲ 고위험가구 별도·우선 관리</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000;"/> <p>[개입]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small>▲ 대상확인</small> 신청없이 자동지급, ▲ 위기시 <small>동의없이</small> 직권신청, ▲ 희망드림 꾸러미 지원</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000;"/> <p>[지원] 위기가구 소득, 돌봄, 심리 지원 <small>▲ 복지급여 유연한 적용, ▲ 형사절차</small> 아동보호 강화, ▲ 자살시도 적극개입</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000;"/> <p>[현장] 복지공무원 적극 지원 <small>▲ 읍면동 복지인력 확대, ▲ 적극행정 확실히 보상, ▲ 복지행정 AX</small></p>

1. (발굴 단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체계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기존에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하던 것을 개선하여, 사용량 변화와 같은 생활 위기 변수를 활용해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1~2개월 주기로 입수하던 위기 정보도 앞으로는 매월 입수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을 지원한다.

그간 발굴시스템을 통해 선별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을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나, 많은 대상 가구 중에서 우선 순위나 위험도를 지자체가 빠르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위험 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도 중첩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개입 단계)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복지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되나,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고 지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자동지급을 추진하고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주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여섯 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출생 신고와 별개로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의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격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한다. 아울러 급여를 신청한 적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다음으로 복지급여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담당 공무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대상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도 복지급여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동의 없는 직권신청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미동의 직권신청의 대상자 범위, 금융재산 조사 장벽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신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원이 시급한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하여 소득과 일반재산만 조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이후에 과다 지급으로 밝혀지더라도 환수를 면제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이러한 조치를 담은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 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직권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려면 상담을 통한 상황과 여건 파악이 필수적이나,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희망드림 꾸러미’ 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로 방문상담할 때 식료품, 생필품 등 생활 물품 세트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복지급여 상담, 신청 단계에서 별도의 공적 지원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희망드림 꾸러미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개입 및 관계 형성에 접근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원·관리 단계) 위기가구 소득, 돌봄, 심리 지원

‘정작 발굴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지원 기준의 유연한 적용과 합리화를 추진한다. 위기 시에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또한 선정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한편 다자녀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준필수재 성격인 현실을 감안하여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기준의 단계적 개선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아동돌봄 가구의 부담을 경감한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 등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아동, 복지 관련 팀들이 공동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구에 대한 상황 공유부터 소득, 돌봄, 정서 등 지원 계획 수립, 사례 종결까지 공동으로 관리하여 공백을 최소화한다.

한편, 아동 양육자에 대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 양육자와 위기가구에 대한 제반 양형 요소를 보다 통합적,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호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지원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가족의 노인 돌봄부담을 경감한다.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25년 412개소)과 치매안심병원(‘25년 25개소) 등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한다. 자살시도 반복 위험을 고려하여 자살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 조치하는 방안 등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추진한다.

4. (현장 업무 지원) 현장 복지공무원 적극 지원

위기가구 방문 및 상담 활성화와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현장 복지 인력을 확대한다. 현재 약 2만 4천 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또한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게 포상금 등으로 확실하게 보상하는 유인 체계도 만든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 활용으로 복지 업무를 효율화한다.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정서적인 공감까지 가능한 AI 복지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시스템도 개발한다. 또한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업무는 자동 처리하고, 급여의 적정성 판정 등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업무지원 AI를 개발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발굴 단계에서는 위험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게 된다. 개입 단계에서 복지대상자의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하고, 위기 상황이면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하여 선제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 및 관리 단계에서는 복지급여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아동, 노인,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확산되고 AI로 복지업무가 효율화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라고 전했다. 덧붙여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 붙임 > 1.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추진 방향

2.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점

< 별첨 > 1.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2.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인포그래픽

담당 부처 <총괄>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서일환 (044-202-3120)
	지역복지과	담당자	서기관	이준석 (044-202-3123)
관계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송영조 (044-202-3140)
	급여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희 (044-202-3144)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홍화영 (044-202-3170)
	복지정보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혜 (044-202-3161)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홍화영 (044-202-3170)
	복지정보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권순형 (044-202-3163)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044-202-3050)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044-202-3052)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이지은 (044-202-3220)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044-202-3224)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410)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연식 (044-202-3419)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장영진 (044-202-3430)
	아동보호자립과	담당자	사무관	강예나 (044-202-3433)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02-3490)
	요양보험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권고운 (044-202-3499)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도균 (044-202-3433)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훈 (044-202-3510)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최승현 (044-202-3530)
	노인건강과	담당자	사무관	장홍준 (044-202-3538)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변성미 (044-202-3590)	
통합돌봄사업과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044-202-3592)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정우 (044-202-3890)	
자살예방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044-202-3892)	
관계부처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현 (02-2100-6341)
	가족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은가연 (02-2100-6343)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정보희 (02-2100-6361)
	아이돌봄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송진우 (02-2100-6375)
	고용노동부	책임자	팀 장	김현아 (044-202-7190)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최원석 (044-202-7193)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오유정 (02-2100-2610)
	서민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목정민 (02-2100-2613)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이도곤 (02-2110-3418)
	사회복귀과	담당자	사무관	한성률 (02-2110-3437)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조재철 (02-2110-3547)
	형사기획과	담당자	검 사	김진규 (02-2110-3544)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최형규 (02-2110-3307)
	형사법제과	담당자	검 사	김동직 (02-2110-3558)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강민아 (044-203-3211)	
미디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3-3223)	
경찰청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최원준 (02-3150-2170)	
강력범죄수사과	담당자	경 정	최원준 (02-3150-2170)	

방향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

목표

- ▶ 발굴-개입-지원·관리 단계별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 ▶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 추진**
- ▶ 아동·노인 돌봄가구, 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과제

발굴 단계

1.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체계화

- ①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정확도 제고
- ② 고위험 가구 관리 강화
- ③ 복지위기 현장 및 가족돌봄 사각지대 발굴 강화

개입 단계

2.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 ①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인 시, 신청 없이 자동지급
- ②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기준 및 보호 방안 마련
- ③ 위기가구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희망드림 꾸러미 지원

지원·관리 단계

3. 위기가구 소득, 돌봄, 심리 지원

- ① 복지급여 지원 기준의 유연한 적용 및 합리화
- ② 아동돌봄 가구의 부담 경감
- ③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 ④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 개입 및 지원 강화

현장 업무 지원

4. 현장 복지공무원 적극 지원

- ① 현장 복지인력 점진적 확대
- ②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업무 부담 경감
- ③ 적극적 복지를 위한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공
- ④ AI 활용으로 복지업무 효율화

추진 방향	기존 (AS-IS)	개선 (TO-BE)
<p>(발굴 단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체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수도가 3개월 연속 체납되어야 위기가구 정보 입수 가능 ■ 복지사각지대,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 각각 위기가구 선정·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를 감지해 체납 전이라도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 반복·중첩 선정된 가구나 재조사 필요한 고위험 가구는 별도 관리하도록 기능 개선
<p>(개입 단계)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복지급여는 우선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지급 절차 진행 ■ 위기 상황이라도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생계급여 등 직권신청 제한 ■ 접근 자체를 회피하는 위기가구에 대한 개입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신고만 해도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자동 지급(보편급여) ■ 기존정보로 자격 확인되면 기초장애연금 신청 안 해도 조사지급(선별급여) ■ 미성년·발달장애 가구 등이 위기 상황이면 동의가 없어도 직권신청해 선제 지급 ■ 최초 방문상담 시, 생활 물품을 지원해 접근성 제고
<p>(지원·관리 단계) 위기가구 소득, 돌봄, 심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해도 선정 기준에 미달하면 긴급복지 지원 곤란 ■ 취약아동 포함 가구에 대한 각종 사례관리가 개별적·분절적으로 진행 ■ 집에 있는 장기요양 수급 노인을 돌봐줄 곳이 없어 가족이 집을 비우기 곤란 ■ 자살시도자가 상담·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사유 확대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로 유연하게 긴급복지 지원 ■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 희망복지팀 공동사례관리로 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단기보호 시설 확충, 가족휴가제 활성화로 가족의 노인 돌봄부담 경감 ■ 비동의해도 자살예방센터가 즉각 개입·지원
<p>(현장 업무 지원) 현장 복지공무원 적극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인력 부족으로 상담 빈도 축소, 전화 위주 연락 ■ 공무원이 복지급여 직권신청을 적극 시도할 유인 부족 ■ 복지 업무량, 방문상담 수요 증가로 업무부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인력 확대로 위기가구 가정방문·상담 활성화 ■ 직권신청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지자체에 확실하게 보상 ■ AI·모바일 기술로 반복·소모적 업무 효율화 및 현장 대응 강화